

#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안봐줍니다

### 광주 587곳·전남 1049곳 전면금지...과태료 일반도로 3배 12만원 습관처럼 밤새 주차면 '낭패'...새로 포함된 광주 172곳 3개월 유예

20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 프란치스카 유치원 옆 도로. 도로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써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1m가 넘는 크기로 선명하게 써져있었지만 차량 4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가려 바로 옆 유치원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경찰이 교통 여건을 감안, 단속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던 탓에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21일부터 이곳에 차량을 세웠다가 적발될 경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광주경찰청은 20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는 사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붙은 곳에서만 주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됐었다.

이에따라 예전 습관대로 단속하지 않았던 어린이보호구역에 잠시라도 차량을 세웠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 대상이던 415곳 외에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됐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587곳에 대한 주정차가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동구 내남동 지한초교와 계림동 프란치스카 유치원 주변도로, 용산동 사랑숲유치원 주변도로 등 172곳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 1049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

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경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주정차가 허용됐던 172곳 중 108곳 도로의 노면표시와 안전표지판 등을 추가로 정비하고 64곳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구간을 조정하는 등 정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다만, 광주시는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새롭게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17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3개월 간 유예기로 했다.

경찰은 또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교통량, 어린이 통학시간 이후의 여건을 감안, 14곳에 대해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경찰서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 갑) 의원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광

주지역 스쿨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578건으로 2020년 전체 적발건수(2015건)를 넘어섰다. 전남 또한 2020년 1335건, 올 6월까지 173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영환 의원은 "작년 8월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보호구역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시행 1년만에 10만건이나 신고됐다"며 "불법주정차 신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이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2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주최한 '1020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병배 기자choi@kwangju.co.kr

## "의뢰인 성추행한 변호사 피해자 정보 항소심 활용" 여성단체, 2차 가해 주장

자신이 변호하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변호사 <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가 피해자 변호 과정에서 입수했던 개인정보를 항소심 재판에 활용하고 있다는 여성단체측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단체들은 2차 가해 행위가 분명한데도 제지하지 않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26개 여성단체는 2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항소를 낮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A 변호사는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개인적 정보 열람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해당 정보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게 여성단체를 주장이다.

여성단체들은 "가해자가 피해자 변호를 맡았던 당시 입수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2차 가해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가해자의 2차 가해행동에 동참하는 재판부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자신의 개인 정보 열람을 허가한 재판부로부터 피해자는 더욱 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측 변호사도 이날 법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매우 문제"라며 "검찰과 법원에 진정을 넣겠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계와 위력을 이용한 상습적인 범죄 행위를 분명히 인지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A 변호사는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가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8일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집유 기간 범행에 재판 중에도 음주운전 사고 1심 집유 뒤집고 항소심서 2년 실형 법정구속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1심 재판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다면,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던 40대 남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의 느슨한 법 적용에 대한 지적도 흘러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명령 등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택시를 타고가다 불법 유턴을 해주지 않느냐며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때리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뒤 같은 해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였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원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첫 재판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12월 다시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돌아다니며 교통을 방해하고 항의하는 운전자 차량을 발로 찬 혐의까지 더해졌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

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 반성하면서 자신의 알코올 의존증을 개선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 집행유예로 선처하면서 보호관찰,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A씨가 의지가 없어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인데 재차 A씨 의지에 맡기는 것은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두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10여차례의 비슷하 범죄 전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뤄진 범행 등을 감안해 '1심 형(刑)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중국산 소금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

### 도매업체 대표 등 14명 적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50대 소금도매업체 대표 등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안경찰청은 20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소금도매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 외에 A씨의 부인, 친·인척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올해 10월 중국산 소금 260t을 사들인 뒤 무안 농공단지 내 빈 창고에서 20kg짜리 국내산 소금 포장지에 나눠 담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소금은 1t 기준 25만원에 불과하지만 국내산 천일염은 100만원(1t) 상당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중국산 소금을 2kg짜리 신안 천일염·해남소금·백조표 포장지 등에 옮겨담아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친인척들은 이같은 범행에 동참하고 일당 1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260t 중 시중에 유통한 140t 외에 120t을 압수했다. A씨 일당이 유통한 중국산 소금은 해남 일대 염전 및 점염 매추공장 등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